

강진 청람중·곡성 한울고 21명 “200m 앞는사태 목격 아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로
안나푸르나 트레킹 중
눈사태 마주하고 곤장 대피
충남지역 교사 4명 실종
기상악화에 수색작업 난항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히말라야팀이 촬영해 보내온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모습. 곳곳에서 눈사태가 발생한 데다, 폭설이 어지고 있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여m 앞에서 눈사태가 벌어졌다. 불과 30분 거리였다. 베이스캠프에서 조금만 일찍 출발했다더라면 자칫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17일 오전 10시30분) 네팔 고산지대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3230m)을 지나던 충남지역 교사 4명이 실종됐다.

당시 눈사태가 발생한 지점에서 230m 아래 떨어진 곳에서는 마차푸차라 베이스캠프(3700m)로 향하던 전남지역 교사·학생 등 21명이 뒤따라가고 있었다.

이들은 눈사태 현장을 마주한 뒤 곤장 등반을 포기하고 대피해 현재 안전한 상황이지만, “눈사태 속에 조난자가 있었을 줄은 몰랐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나섰던 전남 교사·학생들은 전남도교육청의 ‘청소년 미래도

전 프로젝트’에 참가한 ‘히말라야팀’이다. 인성교육 특성화학교인 강진 청람중과 곡성 한울고 학생 7명씩 14명, 교사 2명씩 4명, 보건교사 2명, 전문산악인 이정현 대장 등 총 21명으로 꾸러졌다.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원하는 활동을 기획한 뒤, 직접 실행·평가·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미래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히말라야팀 학생들은 지난해 프로젝트에 선정돼 7개월 간 국내 등산 활동과 등반 교육을 받았다. 이후 겨울방학을 맞아 지

난 13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130m) 트레킹에 나섰다. 가 예기치 못한 눈사태를 마주한 것이다.

현지에서 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이정현 대장은 18일 광주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등반을 하던 중 눈사태로 길이 막힌 데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출발하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청람중·한울고 학생들과 인솔교사들.

다, 안나푸르나 곳곳에 눈사태가 더 발생해 곤장 대피했다”며 “등반과정에서 충남 교사들을 마주한 적이 없어 (그들이) 조난당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나기 이틀 전부터 눈과 비가 많이 내렸다. 올라갈수록 눈보라가 몰아치는 등 기상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눈사태로 부상을 입은 교사·학생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히말라야팀은 사고 직후 하산을 시작해 지난 18일 린트프(1565m)에 도착한 뒤, 이날 현재 오스트리아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20일 출발지점인 포카라로 돌아온

이후 22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현지시각으로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코스인 데우랄리 지역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인해, 네팔로 해외 교육봉사활동을 떠났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10여명 중 4명과 현지인 2명 등 6명이 실종된 상태다.

네팔 현지 수색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지역에 내린 폭설과 추가 눈사태가 우려되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불법당원 모집’ 정종제 행정부시장실 압수수색

광주도시철도공사도 함께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 등
검찰, 마무리 수사 속도

수개월간 4·15 총선 관련 불법당원모집 수사에 집중해온 검찰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부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정 부시장 사무실과 관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추가로 정 부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 동남갑 총선 출마설이 나왔던 정 부시장이 불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정당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인 광주시청·도시공사·환경공단 관계자들이 권리 당원을 모집했으며, 이 중 광주 남구에 주소록 둔 사람만 7700여명에 이른다.

정 부시장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중 일부는 검찰조사에서 정 부시장측의 강압으로 당원모집에 나섰다는 진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검찰조사 이후 정 부시장측으로부터 작·간접적으로 “스스로 당원 모집에 나선 것”이라는 말을 하도록 회유까지 당했다는 말도 흘러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 중 상당수가 정 부시장과 고교 동문 관계인 점을 확인하고, 조직적 개입 여부 등도 확인 중이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도시철도 공사의 한 간부도 정 부시장의 고교 선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근 정 부시장이 주도한 시정 인사에서 이들 고교동문 중 일부가 승진까지 한 점에 주목하고, 특혜상대가 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에서 인사 관련 증거 등이 나올 경우 추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불법당원모집 사건은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앞서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 시정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광주도시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 자택 등도 수색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과 정종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권익위, ‘사무장병원’ 의심 호남 7곳 수사 의뢰

호남권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7곳이 경찰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조사대상은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과 기존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 50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의원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8곳), 한방 병·의원(7곳), 병원(4곳), 치과 병·의원(3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7곳), 수도권(14곳), 영남권(12곳), 충청권(8곳)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적발한 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되면 이들이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수급비 총 3287억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 설 명절 치안대책 총력

범죄예방진단팀 가동 등

광주·전남경찰청이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범죄예방진단팀을 가동하는 등 ‘2020설명절 종합치안대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범죄예방진단팀은 금융기관과 현금대액 취급업소의 취약 요인을 정밀진단해 일제 점검하고, 방범취약점이 발견된 점포와 새벽시간에 운영되는 가게 등은 중점관리점포로 지정해 연휴기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력순찰과 거점근무 지원경력, 자율방범대 등을 배치한다.

경찰은 또 연휴기간 급증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려 가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가 접

수될 경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설 연휴 빙어질 수 있는 교통 정체 등에 대비해 주요 정체구간 내 교통순찰차 집중 배치하고, 소방·구난 견인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연휴 전·후 단계별 집중 교통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과속·난폭 운전 등 막기 위해 암행순찰차와 경찰 헬기, 드론 등을 활용한 집중 단속을 나서는 등,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귀성, 귀경길 운전자는 출발 전 미리 교통방송, 모바일, 전광판 등을 통해 날씨 등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며 “운전전 안전좌석 안전띠 착용,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갓길 주행 안하기 등 올바른 운전자세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만남 거부 여성 동료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 직장 동료를 찾아와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폭행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0분 사이 광주의 한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서 B(여·사망 당시 31세)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한때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고 범행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비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앱으로 접속됩니다.				
2019타경 1114	2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산402-11 51430㎡ [공유지 지분3분의1]단.[유]미용개발지의지분53554분의14,551,유흥환의지분53554분의3,300]	임야	361,724,260 361,724,260
2019타경 2223	1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26-44 3253㎡	전	42,289,000 42,289,000
2019타경 50727	1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51-1 5884㎡	임야	5,119,080 5,119,080
	2	동소 산72 21421㎡	임야	28,918,350 28,918,350
2019타경 50857	1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산230-3 16981㎡ 동소 산230-7 15669㎡	임야	38,032,190 38,032,190
[자동차,중기]				
2019타경 51904	1	사용본거지:해남군 마산면 화내길 26-2 등 자동차등록번호:33보1684 차명:쏘나타 [SONATA]하이브리드 연식:2014	자동차	14,000,000 14,000,000

해남 농산물저온창고 화재 고구마·양파 등 수백 톤 타

19일 새벽 5시 10분경 해남군 화산면 박모(65)씨의 농산물저온창고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에 의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저온창고 1동과 창고에 보관 중 이던 고구마 60t, 양파 120t, 배추 120t 등이 모두 타거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원을 조사중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광주 상가 돌며 13회 걸쳐 절도 2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19일 영업을 끝낸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야 흥민 김모(25)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8일 밤 11시 30분경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 상가 등에서 13회에 걸쳐 27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PC방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새벽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영업을 끝난 상가의 출입문과 방범창 등을 파손하거나 담을 넘어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을 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훔친 천원권 지폐 등 105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가방을 메고 PC방을 옮겨 다니며 생활 하던 중 서울에서 붙잡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친 임신 소식 반갑지 않았다...술 취해 행패 부린 40대

○···여자친구의임신 소식을 듣고 격분해 행패를 부린 40대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서행.

○···1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10분경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광주시 광산구 한 원룸에 찾아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XXX”고

소리치는가하면, 거실에 놓인 탁자와 CC-TV를 부순 뒤 여자친구의 배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위협까지 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여자친구의 임신소식이 반갑지 않았던 A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 같다”며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비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확인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3.입찰서류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비로 개봉을 실시하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청으로 신청하고,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개찰을 실시합니다.				
4.최고가매수신청인과 저수익매수신청인 모두 입찰한 경우를 일괄성 결정으로 매수신청인들 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5.매각하기 및 대금납부				
1.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대하여 매각결정일때 매각권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때 확정된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총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2.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매각결정일 다음 날의 3일만까지 지정된 매수인이 매각권 및 지명권이, 비합법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제출하고, 미납 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6.소유권이전 및 인도				
1.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명권이나 가압류, 압수권 등을 취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인은 매수신청서 제출일 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세영수필확인서 지시에 협조하고, 국민주택과달행법등을 기한내 산신행을 완료하여 매수인이 위 등기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주의사항				
1.권리인 주장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목적신청인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특성사항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의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입찰금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결정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까지, 현행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무리없는 인사청탁(신청과제 비위)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찰한 경우에는 매수신청서 제출일 또는 위 등기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3.특별목적조건의 내용은 매각결정일때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입찰방문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자원은 입찰명령을 집행할 위임을 반드시 입찰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소유권이전등기 등 지목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등기취득지명권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시이윤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등기취득지명권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망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6.공과금 완납은 매각결정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지되거나 집행이 취소, 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결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7.신분증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결정일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없는 계약서 및 공고에 법원에 비위(매각결정일)를 등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9.매각결정 공고의 유효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공고(경매)본선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은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과도 관련이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인권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정이 상환이나 환급,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금상징은 열람에 관여하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매각결정의 공고나 비위(매각결정일)를 등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호관 조길호